

질병으로서의 자본주의

: 북한의 “반(反)자본주의” 통치담론

한재현(동국대학교)

논문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난 이후 벌어진 시장화 개혁과 그에 따라 구성된 통치담론의 한 단면을 포착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상주의론과 조합주의, 가산제라는 개념과 이론을 각각 도입하여 북한의 국가전략과 통치체제를 규정한다. 그리고 북한의 국가전략과 통치체제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조합주의적 중상주의로부터 가산제적 중상주의로 변화했다고 보고 그에 따라 ‘반자본주의’ 통치담론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북한의 내부 강연제강 자료였으며 자본주의를 ‘질병’으로 은유하는 담론전략이 주요하게 포착되었다. 결론적으로 ‘질병의 은유’는 자본주의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체화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변화가 내적인 변질로까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담론전략임을 밝힌다.

주제어 : 북한, 반자본주의, 비사회주의, 통치담론, 중상주의, 질병의 은유, 가산제, 조합주의, 내치, 변화, 변질

I. 문제의식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난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시장화 개혁과 그에 따라 구성되는 통치담론의 한 단면을 포착하여 그 성격을 규명해보는 것이다. 시장화는 중앙계획체제로부터의 변화 혹은 이탈이라는 의미로 보통은 경제학적 혹은 정치경제학적 논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9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 전체를 통칭 ‘시장화’라는 표상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북한 ‘경제’의 변화라는 관점과 ‘북한’의 변화라는 차원이 서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일견 문제이면서도 또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것은 시장화라는 경제적 변화는 국가개인-공간이라는 존재의 각 층위에서 삶을 구성하는 관점-태도-습관-윤리 등을 포괄하는 차원들이 지난 산업화 시기의 그것과 분명 달라지고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변화’를 지난시기 산업화의 근대성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것인지, 일정한 변형을 겪고 있는 것인지를 시장화 개혁 시기의 국가전략의 성격과 그에 따른 통치담론을 분석함으로써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물론 담론분석이 가지는 담론주의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에서 주민들이 그러한 통치담론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하는지는 지면상 다음의 연구로 미루어 둘 수밖에 없다.

본문에서 설명되겠지만 본 논문은 북한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통치의 차원을 총체적인 시야에 놓고 시장개혁을 바라보기 위해 중상주의라는 이론 혹은 개념을 도입한다. 사회주의를 세계체제론의 시각에 입각해 중상주의적 발전전략으로 이해하는 발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상주의를 구체적인 통치의 맥락과 연관해 이해하는 연구는 적어도 북한연구에서는 낯설다. 그렇다면 왜 중상주의와 통치의 연관성에 주목하는가? 그것은 중상주의가 북한의 일련의 경제적 변화와 국가관계, 그리고 주민 통치의

상관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는 개념이자 이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계획에서 시장으로의 일정한 무게중심 이동, 경제적 변화가 던져주는 정치적 위험부담 등을 사회주의의 후퇴로 이해하게 되면 ‘딜레마 내지는 봉착’이라는 차원만이 감지된다. 그러나 중상주의적 통치의 맥락으로 파악하면 그것은 전체적인 국가(발전)전략 내에서 파악된다.

한편 중상주의는 ‘내치(police)’라고 하는 자체의 특수한 통치기술과 전략을 내장한다. 자본주의와 비사회주의, 시장 활동, 외래문화의 유입 등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태도를 이러한 중상주의적 내치의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이 또한 ‘반자본주의’ 담론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정되거나, 혹은 변화와 배타적으로 상충하기만 하는 차원으로 한정시켜 이해하는 관점을 성찰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와 더불어 북한의 반자본주의론, 혹은 비사회주의론에서 나타나는 언술상의 특징으로 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질병’과도 같은 것으로 은유해 인민들에게 주입하는 양상을 발견하게 되어 그러한 질병의 은유가 통치담론의 성격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중심 테마로 설정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II. 북한의 ‘가산제적(patrimonial) 중상주의’와 통치

1. ‘강성대국’ 전략과 중상주의(mercantilism)적 특질

본 논문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와 자구노력을 ‘중상주의적 발전전략’ 상의 수정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초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발표(1991년 12월 28일), ‘신무역체계’ 수립(1992년 2월), 대외개방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개정(1992년 4월 9일)

및 외국인투자법 등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령정비(1992년 10월 이후), ‘무역제일주의’ 방침 결정(1993년 12월 8일),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야심적인 접근계획’(1994년 4월 22일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 발언)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 조성 과 자본주의 세계 시장으로의 편입을 통한 생존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고유환에 의하면 “세계 체제론적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자력갱생식 상하이동 발전전략(정치·사상 우선의 혁명적 중상주의 또는 국가사회주의 발전전략)의 실패를 자인하고 유치를 통한 발전촉진전략(대외개방을 통한 수출주도형 중상주의 발전전략)으로의 발전전략의 수정을 의미한다.”¹⁾

본 논문에서 중상주의라는 개념을 들여오는 이유는 시장화(marketization)로 표현되는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상을 어떤 극적인 ‘단절’의 징후로 평가하는 연구경향과 비교해 북한 자신의 전략적 노선 속에 그러한 변화상을 위치시키기 위함이다. 즉, ‘변화 속의 지속’ 혹은 ‘지속 속의 변화’를 어떤 전체적인 맥락 하에 위치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계획(planning)으로 표상되는 사회주의 정치경제 메커니즘이 시장(market)으로 대표되는 탈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 보다는 이를 관통하는 발전노선 혹은 성장전략 하에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위치시켜 보는 것이다. 또한 이는 사회주의로부터 탈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혹은 개혁·개방이라는 목적론적 논의 구도를 선행시키기에 앞서 우선 북한의 국면적인(conjuncture) 정치경제체제의 성격을 규명해보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난 이후 계획체제의 일정한 붕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국에 의한 산업정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중상주의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산업정책의 유무인 바, 국가에 의한 산업정책에 대한 기능적 구성물로서 계획과 시장이 특정하게 위계적으로

1) 고유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생존전략.” 『세계정치경제』 제3호, 1996.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적 질서의 확대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 하는 문제를 이러한 총체적인 성장전략과의 관계 하에서 규명할 때 변화의 질적 성격이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1990년대 후반 내지 2000년대 초부터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기치 하에 일종의 부국강병²⁾을 내세우면서 ‘신사고’, ‘단번도약’이라는 새로운 사고와 담론을 매개로 IT와 같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을 북한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것이 대표적이다.³⁾ 중상주의노선 혹은 이론은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의 한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통해 생산과 수출을 신장시키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에는 국내 소비, 자원의 활용과 배분, 시장의 발달에 대한 개입을 포함한다. 요컨대 이러한 중상주의의 시스템과 정책이 목표로 하는 바는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의 건설이다(강조는 필자).⁴⁾

그러나 당연하게도 사회주의 북한의 중상주의는 고전적 중상주의(classical mercantilism) 이론에 전면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 일찍이 윌러스턴이 20세기 현존사회주의 체제를 두고 고전적 중상주의의 “변종”이라 칭한 바 있듯이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발전전략은 경쟁하는 국가를 “능가(surpassing)”하고, “따라잡기(catching up)” 위한 “맑스주의 옷을 입은 중상주의 전략(Marxist clothing a mercantilist strategy)”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주의체제의 발전전략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에서의 “상향이동(upward mobility)”을 성취하기 위한 반주변부국가들의 “추격발전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 이러한 현실사회주의의 추격발전의 욕망은

20세기 ‘산업주의’(industrialism)에 대한 그들의 굴복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변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실사회주의 발전노선의 부흥과 쇠퇴, 그리고 새로운 모색에서 중심은 언제나 ‘국가’, 그리고 국가의 ‘강화’였다는 점이다. 중상주의를 북한의 정치경제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불러들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국가강화전략의 유지와 그 변형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이러한 국가강화전략의 이론과 전략이 산업주의 시기에 공장과 노동을 둘러싼 ‘생산성의 정치’로 나타나기도 하고⁷⁾ 도덕적 호혜교환관계에 기초한 일종의 도덕경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⁸⁾

중상주의적 관점은 따라서 ‘계획에서 시장으로’의 이동에 시선을 쏘기 보다는 ‘국가와 시장의 위계서열과 접합’이 전체적인 국가의 통치의 맥락에서 규정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데 더욱 무게를 둔다. 예컨대 1990년대 후반에 옐친에서 푸틴으로 권력이 넘어가던 전후 러시아의 시장개혁 과정에서 옐친 정권의 급진적인 ‘자유주의’적 처방에 따른 경제위기와 정치 불안 및 사회혼란을 수습하면서 나타난 푸틴 정권의 ‘강력한 국가’에 기반 한 신중상주의적 시장 개입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신중상주의적 시장개혁은 NATO의 확장에 대한 견제라는 중요한 정치적 함의와 긴밀히 연결된 국가통치체제의 강화와도 연결되는 것으로서⁹⁾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라는 시장개혁이 국제정치적 힘의 차원과 맺는 함의를 동시에 시야에 넣을 수 있는 관점인 것이다.¹⁰⁾ 경제난 이후 새로 등장한 강성대국 전략이 기등으

2) 조동호는 선군정치가 ‘강병’이라던 국가경쟁력 제고를 ‘부국’으로 보고 있다. 조동호,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북한경제』 2001-01.

3) 북한의 강성대국전략과 IT 발전 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정민, 『북한의 IT전략: IT전략, 전자정부, 인터넷』,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pp. 16-60 참조.

4) Haque, N., “Beyond Planning and Mercantilism: An Evaluation of Pakistan’s Growth Strategy.” *The Pakistan Development Review*, vol. 45, no. 1, 2006, pp. 5-6.

5) 고유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생존전략.” 『세계정치경제』 제3호, 1996.

6)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서울: 박종철출판사, 2002.

7) 차문석, 위의 책;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0.

8)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9) 성원용, “강력한 국가 틀 속에서 신중상주의정책 추구.” 『통일한국』 제2호(통권194호), 2000, pp. 80-83.

10) Mansourov, Alexandre Y., “Mercantilism and Neo-Imperialism in Russian Foreign Policy during President Putin’s 2nd Term.”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VII, no. 1, 2005.

로 삼는다고 하는 ‘사상, 총대, 경제’는 바로 국가 간 체제의 현실과 경제전략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가 내외의 질서를 세우고 핵심적인 경제적 동력을 중심으로 국가의 통치능력을 뒷받침 하고자 하는 중상주의적 국가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큰 틀에서 중상주의를 통해 북한의 통치와 국가전략의 특질을 살펴보면서도 북한에 고유한 정치 전략과 국가-사회관계의 성격을 또한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중상주의적 국가전략이 통치의 외연을 구획한다면 국가-사회관계는 그 고유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작동방식을 구성하게 된다.

2. 조합주의(corporatism)의 와해와 가산제적(patrimonial) 통치

국가 간 체제라는 국제적 경쟁구조 속에서 채택한 국가의 추격 발전전략 하에 사회주의권과의 무역, 자본과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벌인 초기 중공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그 동원메커니즘으로서 조합주의적인 국가-사회(노동)관계를 형성하였다. 조합주의는 이러한 국가의 발전전략에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노동) 사이의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관계 양식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주의할 것은 조합주의가 북한의 국가-사회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많은 공백을 남기는 것도 사실이란 점이다. 따라서 일정한 한계를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적극적으로 포착해낼 수 있는 지점은 경제난 이후 계획체제가 와해되면서 이전의 국가-사회의 후견-충성 관계 내지 도덕적 호혜-보답 관계의 와해를 선명히 대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조합주의로 본격적으로 언급한 연구자는 브루스 커밍스¹¹⁾로 그는 북한을 “사회주의 코포라티즘” 국가로 명명하면서 이는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모방하면서도 전통적 문화인 유교의 영향을 받아 태

11) 브루스 커밍스 지음, 김동노 외 옮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p. 576-599.

양 왕 김일성을 구심점으로 하는 확대된 가족제도적 양상을 보여준다고 요약했다.¹²⁾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서구 학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적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그보다는 그러한 조합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적인 조합주의로서, 왈더의 표현을 빌면 사회주의적 신전통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사회주의 고유의 체제와 작동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봄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발전전략에 대한 정치적 동의를 끌어내고 인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맺어진 인민들과의 정치적·도덕적 교환관계를 기초로 한 조합주의적 국가-사회관계의 성격을 벗어버리고, 예컨대 ‘통치자금’ 마련과 같은 정권유지의 협소한 차원이 노골화한 가산제적 중상주의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산업화시기 국가와 노동, 국가와 사회관계를 특징지었던 조합주의적 성격은 계획체제의 붕괴와 극심한 경제난 등 국가의 동원능력을 가능케 하던 배급제를 대표적으로 하는 정치적·경제적 후견과 통제의 작동이 작동 불능에 빠지게 된 것이다.¹³⁾ 이러한 가산제적 성격은 북한 정권의 부패와도 연관되지만 중상주의 혹은 신중상주의에 내재한 위험이기도 하다. 즉 중상주의가 핵심적 전제로 두고 있는 “국부”의 개념이 모호하여 사익과 지대추구로 빠져들 위험이 현실적으로 상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권력이 세습되면서 정당성이 취약한 체제일수록 제도보다는 인물적 관계에 의한 사익과 지대추구권의 배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 장원석, “2004년 브루스 커밍스의 북한독해 일고.” 『통일문제연구』, 2004년 상반기(통권41호), p. 273.

13) 베버의 ‘가산제’ 논의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한 신가산제국가론(neo-patrimonialism)은 인물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가산제적 체제와 관료제의 법적-합리적 체제가 동시에 혼합되어 병존하는 체제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개념으로서, 통치가 제도와 공식규범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후견-보호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체제를 말한다. 이 체제의 통치기제 중 핵심은 분할지배(divide-and-rule)로서 이는 앞서 말한 인격적 지배로부터 나오는 충성경쟁의 통치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신가산제 개념과 분할지배는 북한에 만연한 부패현상을 포괄하는 등 설명력을 획득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부패의 극단적 경우로 그것이 체제화의 단계까지 이른 도적통치(kleptocracy)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연구와 독재론, 그리고 가산제 및 신가산제에 대한 이론적 정리와 북한연구의 시사점은 다음을 보라. 박형중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이러한 사적 후원의 비공식적 제도 속에서 통치 엘리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근대 국가의 합리적 질서를 이용한다.¹⁴⁾ 통치권자와 파벌로 얽힌 소수 특권층을 중심으로 한 후견-보호 정치는 엘리트 간, 그리고 엘리트와 사회계층 간의 상존하는 불만과 잠재된 갈등 속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지대추구권을 둘러싼 경제정책의 불안정 속에 엘리트 통제 및 내치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는 조합주의적인, 혹은 도덕경제적인 호혜-보답에 근거한 인민의 규율모델이 일정한 부침과 변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규율모델이 일정하게 후퇴한 후 도래하는 주체화모델은 무엇이며 그에 상응하는 통치담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본 논문이 포착해보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3. 중상주의적 통치와 내치(police)의 정치학

본 논문은 먼저 북한의 국가성격 내지 경제발전 전략을 중상주의적 통치의 관점을 참조하면서 개념화하고자 한다. 중상주의적 국가발전 전략은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규정하는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하는 세계체제론의 시각과 상통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는 낙후된 경제의 극복과 생산력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편입이 필수불가결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역할의 강조를 통해 국가발전의 대안을 찾으려는 시각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고수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보다는 국

가의 직접적인 진두지휘 하에 중심 국가들의 발전을 따라잡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¹⁵⁾ 이러한 중상주의의 특질은 중농주의와 뒤이은 정치경제학 학파와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그들은 절대주의 국가의 통치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국가가 사회에 전 방위로 개입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여 시장 참여자의 의욕을 좌절시키고 수동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했다. 대신 화폐축적과 단순 교환보다는 생산과 소비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강조하면서 교환을 매개하는 노동의 생산력과 소비력에 주목한다.¹⁶⁾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통제함으로써, 경제발전이 시민사회 출현의 물적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을 소거하기 위해 일종의 가산제적(patrimonialism) 통치방식을 활용한다. 북한의 시장과 시장화는 이러한 국가론의 지평 속에서 파악되어야 그 함의와 한계를 동시에 시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의 중상주의적 통치성은 그 자신의 통치모델을 지니며 이는 또한 그 자신의 권력/지식을 통해 실현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볼 점은 북한의 비사회주의론과 반자본주의 담론이 일련의 ‘질병의 은유’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이러한 일련의 의학적 담론이 통치모델과 연관되는 권력/지식의 형태로 나타났음을 서유럽 국가의 계보학적 분석 속에서 통찰해 낸 푸코를 참조해볼 수 있다. 푸코는 그것을 <나병의 주권모델>, <페스트의 규율모델>, <천연두의 안전모델>로 분류한다. 나병은 추방을, 페스트는 검역과 규율을, 천연두는 예방과 통계를 발전시켰는데 중상주의적 통치는 이 중 페스트의 규율모델에 상응하는 통치를 주요하게 발전시켰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유념할 것은 각각의 모델이 서로 대체되거나 대립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면서 또한 접합

14) 김상은, “중종, 신가산제 그리고 내전: 엘리트-대중 이해관계 분리.”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p. 47.

15) 함명식·박찬서, “중국에서의 경제개혁과 국가-노동관계의 변화.” 『연세학술논집』, 1999, p. 309.

16) 하호수, “푸코의 세 권력/지식 모델과 생명정치.” 『동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행정학회, 2010, pp. 5~11.

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북한의 통치 또한 추방과 규율, 예방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양상을 보이며 동시에 그 주된 모델이 국면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이처럼 중상주의적 통치성이라는 국가론의 지평 속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분석하는 것은 경제적 변화가 통치의 성격과 어떤 연관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차원에서 푸코는 『안전, 영토, 인구』에서 중상주의적 내치(police) 국가에서 중농주의적 통치성(governmentality)의 국가로 이행하는 근대국가의 계보학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¹⁷⁾ 그리고 이러한 통치패러다임 상의 변화를 논구하면서 푸코는, 개별적 주체를 낱알이 파고들면서 규율하는 권력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조절에 관한 지식(정치경제학), 그리고 ‘배제’라는 새로운 권력의 기술로 변화하는 양상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통치패러다임의 ‘변화’는 ‘규율에서 배제’라는 단절적인 이행의 과정이 아니라 규율과 배제가 서로 공존하면서, 그러나 위계적으로 접합되는 그러한 양상이라는 점이다. 즉 북한의 ‘시장화’ 개혁 국면에서 벌어지는 국가의 통치, 개별 주체 각자에 대한 규율·규범화 및 자기 스스로의 통치, 그리고 국가가 전체 인구 차원에 작용하는 통치가 서로 교차하고 통합되는 통치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의 도구로서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시장, 개별과 집단, 윤리와 정치를 관통하는 ‘정치적인 것’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유의미한 도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은 따라서 북한에서 나타나는 ‘시장화’ 개혁 국면 상의 통치기술을 파악함에 있어서 ① ‘사법’의 정비 및 일정한 합리화, ② 전체 인민을 도덕의 호혜 관계 속에서 규율했던 산업주의 시기의 통치메커니즘의 변화 ③ 시장화 국면에서 보이는 규율의 일정한 후퇴와 배제의 정치 등을 통합적으로, 동시에 위계적으로 파악하

17)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 서울: 난장, 2011.

는 데 있어 주요한 분석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의학적 담론과 내치의 상관성에 주목해서 북한에서 강성대국 전략을 정치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제창된 선군정치 담론 또한 이러한 ‘내치’의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본 논문의 논의와 연계된 함의가 파악된다.

1990년대 후반 북한체제위기상황에서 ‘위기관리체제’로 등장했다고 하는 선군정치에 대한 논의들의 특징은 선군정치를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군대의 영향력이라는 맥락에서만 다룬다는 점이다. 특히 군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일견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 군력이라는 물리적 토대는 가장 효율적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 내지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군정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억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생산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위 논의들은 선군정치를 통한 ‘항시 전시체제’의 ‘설정’이 가지는 ‘전략적 효과’, 즉 체제 내외적인 갈등상황에서 선군정치를 통한 ‘항시 전시체제’라는 설정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의식적 차원에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참’인 것으로 재생산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동안 간과되거나 단순한 억압의 측면만을 강조한 차원에서 나아가 선군정치라는 담론의 생산적(positive)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생산적’이란 표현은 규범적인 차원이 탈색된 중성적인 표현으로 억압이라는 단순한 부정성이 아니라 ‘참과 거짓’, ‘친구와 적’,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적 대립구도’가 주체들을 통해서 마련됨으로써 순수이데올로기의 애매성을 탈화시키고 의식적 차원에서 체제구성원들에게 순수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부단히 재생산해내는 주체화 과정의 의미한다.¹⁸⁾ 이러한 관점에 힘입어 또한 류길재는 군사 국가를 ‘국가 운영

18) 정병화, “‘관성적 권력’으로서의 ‘선군정치’.” 『대한정치학회보』 제20집 제2호, 2012, pp. 69~87.

을 위한 규범과 의식, 절차, 관행 등 제도적 틀이 군사문화 또는 병영문화에 토대하고 있는 국가'로 규정한다.¹⁹⁾ 선군정치의 전략적 의미와 이것의 담론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바로 선군정치를 통한 군사국가화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어떻게' 체제 내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선군정치의 전략적 효과로서 '균질화'(homogenization) 내지 '표준화'(standardization)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그것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분석되는 이질적인 것에 관한 '질병의 은유'와 맥락을 같이 한다. 체제위기 극복의 주체로 '군(軍)'을 내세우는 것은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에서 군대로의 이동시키는 것, 즉 20세기 사회주의의 이념으로부터 이탈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질적인 것으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한다는 '면역학'의 차원, 즉 근대권력의 극단적이며 노골적인 북한적 형태로서 인식될 때 보다 많은 것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의 은유'는 내적인 통일성을 규율함과 동시에 이원론적 대립이라는 모습을 띠며 나타난다. 이는 '방역(防疫)'이 언제나 안과 밖이라는 단일 전선만을 용납한다는 점을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이러한 방역의 체제는 '동지와 적'이라는 이원론적 대립구조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밑바탕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fear)라는 실존적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 공포는 개인이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현상이자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 사람이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다. 이것은 자신의 안전이나 이해(interest)가 위협을 당할 때 나타나는 가장 원시적이며 본원적인 성격의 감정이다. 이처럼 선군정치의 '균질화' 담론은 경제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면서 그 책임소재를 '변질'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 선군정치 등 다양한 표제를 달고 나온 정치적 담론들은 공히 '극복과 회복'의 내러티브를 통해, 단결의 총화로서 새로운 희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은폐하고 식량

난의 참혹함을 승고한 희생으로 격상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요컨대 북한은 군대라는 방역의 주체를 내세워 일련의 변화가 '변질'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자본주의를 질병으로 분류시켜 인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윤추적방식에 따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력의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혁신'의 가능성을 질병이라는 공포와 즉자적 혐오의 대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는 '미 제국주의'와의 군사적 정전상태에서 일종의 비군사적 공격(즉, 침투)일 수 있기에 시장은 받아들여면서도 이것이 권력에 대한 침식이나 더 나아가 체제비판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인데 바로 이 '미 제국주의'라는 상징은 북한에서 '질병'의 은유와 매우 친화성이 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보다 명확해진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가 일련의 방역의 언술로 표현되는 담론전략의 양상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반자본주의 통치담론과 질병의 은유(metaphor)

현재의 북한을 과연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직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의 제한성은 담론전략으로는 어떻게 표출되는가? 그러한 담론전략에서 사회주의 아닌 것, 즉 '비사회주의'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비사회주의'와 '반자본주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 장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근거에 깔면서 북한의 비사회주의와 반자본주의에 관한 담론들을 살펴본다. 또한 앞서도 설명했듯이 그러한 통치담론들에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질병의 은유'와 방역의 관점을 북한의 내부분건을 통해 두텁게 들여다보도록 한다.²⁰⁾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두 가지를 언급해 두고자 한다. 하나는 선행연구와

19) 류길재, "‘예외국가’의 제도화: 군사국가화 경향과 군의 역할 확대." 최완규(편),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pp. 181~120.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2장의 중상주의와 면역학적 패러다임의 연관성에 대한 간략한 사전적 논의이다.

먼저 ‘비사회주의’에 관한 기존의 실증주의적 논의 방식과 본 논문의 담론 분석 방식의 차이가 그것이다. ‘비사회주의’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대체로 비사회주의를 이미 정해진 것으로 규정한 뒤 시작한다. 본 논문은 북한에서 말하는 ‘비사회주의’를 일반적 의미의 ‘사회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미리 규정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탐구되어 사회주의 북한의 성격을 역으로 고찰하기 위한 중요한 논구 대상임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사회주의론에 의하자면 지금의 북한의 모습은 사회주의와 무관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에서 말하는 비/사회주의는 역설적 의미를 띠게 된다. 북한에서 지켜야 할 것으로 상정된 ‘사회주의’는 무엇을 지시하는가? 본 논문은 가설적으로 ‘사회주의’는 ‘국가’와 ‘민족’의 다른 이름임을 전제한다. 또한 실제적으로도 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는 혼재되어 서로를 구성·현존케 한다. 장마당을 비롯한 시장은 국가의 조세수입처임과 동시에 비사회주의의 온상으로 단속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메커니즘 자체는 일정한 목인과 용인 속에 조절과 통제의 수단을 발휘해 관리하면서도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라고 하는 가치와 규범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히 알레르기 반응

20) 본 논문에서 검토된 텍스트들은 2000년대 초반 자료들로서 종합시장제 이후, 그리고 최근 김정은 정권시기까지 변화된 당국의 태도와 조치 등을 담지는 못하였다. 다만, 본 논문이 주목하는 바는 2000년대 초반 북한의 ‘변화’를 해석하는 과제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재검토되면서 ‘현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당시 내부문건에 나타난 당국의 태도와 그것의 담론적 발전을 분석해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최근 김정은 정권시기 공식담론과의 비교를 통해 그 분석적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하다. 또한 자본주의를 경제발전의 필요에 따라 일정하게 수용하는 방식이 담론 상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지의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지면상의 한계로 담지 못했음을 밝히며 향후 과제로 남겨둘을 밝힌다.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은 내부문건들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사상문명과 생활양식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자.” 『강연제강(근로청년용)』,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02; “자본주의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 『학습제강(간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전초병들을 위한 교양자료』 제21호(누계493호),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등이다. 이들 내부 ‘강연제강’ 자료들에는 기존 북한 공식문헌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판에 박힌 언술들 외에 흥미롭고도 새로운 표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흥미로운 분석의 텍스트로 활용될 만하다. 이 외에도 관련한 공식문헌들을 부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에 버금가는 혐오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가의 이러한 중첩된 태도는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일련의 관점을 드러내 주는 주요한 담론적 논구대상으로서 다양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 “비사회주의적 행위”의 항목은 그 자체로 자명한 대상이 아니며, 구성적·문제적인 것들로 전제된다. 따라서 각 항목을 이미 자명한 것으로 내버려둔 뒤, 그 항목들이 ‘언제, 어떻게 출현하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지’를 추적·평가하는 기존의 논의들과 본 논문의 전략은 차별화된다. 다시 말해 시장화 국면과 함께 출현하는 다양한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의 항목을 발견하고 나열하는 연구 등 일련의 ‘실태 조사적’ 분석은 본 논문의 관심 밖에 있다. 물론 이것은 각각의 연구 방법상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주목하고 포착하려는 지점의 차이를 말할 뿐이다. ‘얼마나, 어디까지 퍼져있나’와 같은 실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연구자들이 누적한 성과들로 일정하게 예상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련의 이러한 실증주의적 접근이 아닌 담론 분석에 관심을 둔다.

담론이론에 따르면 담론은 사회와 정치의 세계를 구성한다.²¹⁾ 따라서 여기서는 담론분석을 통해 거꾸로 “비사회주의”의 행위 항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성의 이데올로기 분석으로는 유의미하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재현 방식들을 발견하고 그것의 정치적 함의를 논구한다. 이러한 담론분석의 필요성은 여기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비사회주의 관련 문건들이 북한의 여타 1차 문헌과 달리 매우 흥미로운 진술과 용법들을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어 담론분석에 적합한 활력을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비사회주의에 관한 담론적 구성을 두텁게 들여다보면 표면적인 언술 상으로는 “비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속살은 독재 일반의 심성구조가 드러나고 있으며 남한의 박정희시기 ‘풍속검열과 통제’를 다룬 각종 기사

21) Howarth, D., *Discours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2000.

와 논문들에서 매우 비슷한 언술과 표현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이는 북한의 ‘반자본주의론’의 이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거론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권력이 부정하는 “자본주의”란 무엇이며 “비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과 자본은 기능적으로 들어오되, 삶의 양식까지 바뀌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삶의 양식’의 변화란 아마도 자유와 혁신을 기치로 한 주체성—의식뿐만 아니라 정서, 감정, 멘탈리티 등—의 변화가능성일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대응 또한 이러한 범위와 한계에 대한 당국의 입장파 판단 여하에 달려 있을 것이다.²²⁾

다음으로 앞선 장에서 제시된 증상주의적 통치와 질병—혹은 면역학적—담론이 맺는 관계 문제이다. 한 사회를 병리학적 차원으로 은유하면서 그것과 권력의 메커니즘을 연계해 포착한 학자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병철을 언급하면서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바를 간략히 드러내 보겠다.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는 언급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면역학적 기술에 힘입어 바이러스의 시대를 이미 졸업했다”고 평가한다. 이른바 바이러스와 면역학적 기술이라는 부정성의 시대를 넘어서 “긍정성의 과잉”에 의한 “신경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즉 그에게 면역학적 시대는 “안과 밖, 친구와 적, 나와 남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진” “지난 세기”의 것으로서 “냉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 과정은 이러한 면역학적 패러다임과 “양립하기 어렵다.” 면역학적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단적인 징후로 “이민자나 난민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짐스러운 존재로 여겨질 뿐”이라는 점이 예시된다.²³⁾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병

철이 제시한 이러한 부정성의 시대의 특징을 북한은 여전히 지닌 채 면역화(immunization)의 정치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역화는 “면역 반응을 촉발하기 위해 다만 타자의 파편만이 자아 속으로 투입”됨으로써 “부정의 부정(이) 치명적 위험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과정이다.²⁴⁾

한병철이 제시한 이러한 면역학적 패러다임은 푸코에게서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통치기술로 명명된다. 그리고 바로 이 면역학적 패러다임은 푸코에게서 증상주의의 시대 내치(police)와 ‘규율’적 통치패러다임으로부터 증농주의의 예방적 통치로의 이행기에 상응하게 된다.²⁵⁾ 전염병으로부터 일상을 보존하고 이질성으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삶의 전 영역을 둘러싼 복잡한 분할과 경계선이 작동하게 되며 이러한 규율의 대처방식은 엄격한 “규범들을 참조하면서 일어난 행위들을 구별하고 통제하는 것이다.”²⁶⁾

국부의 증대를 국가 내부의 질서와 균질성의 강화 및 국민역량의 증대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증상주의 패러다임은 바로 이러한 규율과 면역화의 통치에 바탕하고 있으며 그것이 무역과 교역 등 접촉과 교류의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지를 동시에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1. 은유들

2002년에 작성된 ‘근로청년용’ 내부 강연제강 문건인 「자본주의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자」의 문건 구조는

22) 북한의 자본주의 및 비사회주의의 담론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의외로 희박하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으로 최대석·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통일문제연구』, 23권 제2호, 2011. 그 외에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개방에 대한 인식변화와 평가를 다룬 연구로 이정철, “북한의 개방 인식 변화와 신(新)자력갱생론의 등장.” 『현대북한연구』, 9권 제1호, 2006.

23) 한병철 지음,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pp. 11~15.

24) 위의 책, p. 16.

25) 미셸 푸코, 앞의 책. 푸코는 정상화의 메커니즘으로 사법정치, 규율정치, 안전장치를 들고 있으며 증상주의의 시대, 즉 페스트의 시대에는 규율정치가 두드러지게 작동된다고 설명한다.

26) 강미라, 『미셸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3, pp. 47~48.

먼저 ‘퇴폐적인 노래’, ‘이색적인 녹화물과 출판물’, ‘종교 및 미신행위’, ‘옷차림과 머리모양’, ‘도박’, ‘사치와 허례허식’ 등 크게 여섯 가지 범주의 자본주의적 사상문화와 생활양식 등이 청년들 사이에 퍼져 있는 양상들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와 현황 해설에 근거해 향후 이들에 대한 ‘투쟁 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우선, ‘양상들’을 문건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문제들’로 지적된 비판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자.²⁷⁾

1) 혁신과 변질 사이

우선 “혁명적인 노래의 가사를 교묘하게 외곡”하는 현상과 더불어 “다른 나라, 혹은 출처가 없는 퇴폐적인 노래”들을 부르는 행위가 지목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혁명가요의 개사와 더불어 ‘창법’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 “기백 있고 유순한” “우리식의 발성법” 대신에 외국인 혹은 해외동포들의 창법을 흉내 내면서 “목을 꼬아 가며 괴상망측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의 특성을 리용하여 류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의 “진취성”과 “새것”에 대한 감수성은 북한에서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지닌 세대의 고유한 긍정성으로 찬미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고유한 특징이 “적들이 노리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 즉 퇴폐적인 행위의 ‘가능성과 잠재성’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청년의 장점』이란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보면 북한 청년들의 대표적인 품성들 중 하나로 “순박성”을 든다.

“우리 청년들만큼 ... 순박한 청년들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²⁸⁾

가능성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퇴락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신체가 바로

북한의 “순박한” 청년들이야말로 바로 이 청년들이야말로 예방과 면역학적 훈련의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특정 기능 요소를 추출하여 훈련시키고 이것들을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조합”²⁹⁾하여 신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권력의 장인 것이다.

2) 전염병과 경각성

다음으로 “이색적인 녹화물과 출판선전물”을 몰래 보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경각심을 당부한다. “설마 내가 계급적 근본이야 잇겠는가” 하는 안이한 태도와 인식을 경계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는 내부를 “좀 먹고” “어지럽히는” 요소로서 “용서 받지 못할 행위”로 지목된다. “부르쵸아 사상독소가 우리 내부에 쉬를 쓸지 못하게” 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쉬쓸다”는 한국어로는 ‘쉬슬다’ 즉, ‘파리가 알을 여기저기에 낳다’는 말이다. “좀”이 쓰는 것과 “쉬쓰는” 것은 뿌리를 뽑아 없애기 전에는 언제든지 확산·창궐할 수 있는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서 방역의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 각 개인들, 그리고 개인들 간에 부과되는 씬 없는 일상의 도덕과 규율을 체화하도록 하는 방역의 상황과 유사한 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항구적이고 일상적인 규율은 “동기와 표현형태가 어떠하든 ... 극히 부분적이(라도)” 간단히 스쳐 지나가선 안 된다는 언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권력의 이러한 완전무결한 방역의 욕망은 특별히 사회주의적인 발상 혹은 태도라기보다는 독재 혹은 파시즘의 일반의 욕망과 멘탈리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현은 “종교 및 미신행위” 항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미신행위가 “악성종양”이라는 암(癌)의 형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자본주의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은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일단 여기에 물 젖게 되면 벗어나기 힘들다”는 식으로도 표현된다.

27) 이하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는 것은 제시된 해당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다.

28) 최정현·김미애, 『조선청년의 장점』,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1, p. 122.

29) 하호수, “푸코의 세 권력/지식 모델과 생명정치.” 『동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행정학회, 2010, pp. 9.

3) 더러운 타자와 일상의 규격화

전염병은 언제나 “타자화”된 은유로 표현된다.³⁰⁾ 문헌들에서 쉴 새 없이 등장하는 “이색적인”, “너절한”, “추잡한”, “색정적이며 구역질나는”과 같은 표현들은 자본주의에 관한 ‘즉자적인’ 혐오의 감정만을 허용한다. 이는 파시즘의 통치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종주의적 정서로서 대상에 대한 사고 판단을 중지시키고 특정의 감정구조를 명령하는 태도와 유사하다. 또한 여기서 타자란 “외국 출장자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외부의 병균을 보균할 가능성이 있어 공동체의 내부로 옮기는(“류포”) 주체들로서 오염된 타자로 규정된다.

“이질화”는 사회주의사상의 본질을 이루는 “일심단결”에 균열을 내 감염의 경로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오염으로부터 “민족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우리의 생활양식”을 “이질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모에서부터 시작해”, “장발”, “여성의 화장 및 옷차림” 등으로 “민족적 미감”을 지켜 나가야 한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모든 것을 제어 보고 분석판단하며 오직 그대로만 숨 쉬고 움직여야 한다.”

“일상적인 생활령역을 보위하라.”

“외판 생각 ... 잡념을 버리고 ... 자기 맡은 일에만 전심해야 한다.”

“부르쥘아사상문화에 자그마한 환상도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한다. ... 그런 태도 일부 일꾼들은 ... 부르쥘아사상문화에 그 무엇이 없겠는가 하는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은근히 그것을 넘겨다 보고 있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문화에 대한 우월감, 영예감을 깊이 간직해야 한다.”

“사회주의 생활양식대로 일상생활을 건전하고 문화정서적으로” 하면서

“방탕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거두고 책읽기, 예술소조활동, 군중체육과 같은 명랑하고 건전하며 낙천적인 일상을 영위할 때 자본주의적 문화 침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담론은 방탕하고 비도덕적인 생활, 즉 윤리적인 것과 특정한 질병발생의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은유화된 질병의 담론과 매우 흡사한 인식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이처럼 방역 지침을 생활화하고 일체화하는 것은 우리가 ‘사상결정론’적 관점에 근거해서 북한의 주민을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신체와 정서, 감정의 문제까지 분석의 초점과 영역을 넓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4) “고상한” 미풍양속과 도덕화 된 미감

북한의 청년들과 특히 여성들에게 강조되는 규범으로 ‘옷차림과 머리단장’은 북한의 각종 문헌들에서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선군시대의 요구와 현대적 미감에 맞춰 고상하게” 외양을 갖추라는 것이다. 즉, “고상하고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즐겨 입”을 대신에 소위 “《류행》을 따른다고 하면서 웃웃은 길게, 치마는 허벅다리가 보일 정도로 짧게 해입고” 심지어 “겉개바지”(레깅스)에 “끝신”(슬리퍼)을 끌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운줄을 모르고 있다.” 또한 “눈두덩에 멍이 진것처럼 시퍼런 칠을 하는(마스카라) 등, 화장을 괴상망측하게 하다못해 나중에는 눈쌍까풀수술을 하거나 속눈썹과 입술에 입묵(문신)을 하고 코밑에 《기미》까지 새겨 넣는 어처구니 없는 놀음까지 벌리고 있다.”

즉 자본주의 문화는 반사회주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는 ‘민족적인 고상함’과 정갈한 윤리에 배치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날라리풍’, ‘황색’ 등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웃을 언제나 깨끗이 입던’ 단정하고 고상한 ‘민족적 우수성’을 사회주의적 미덕으로 규율화 한다. 결국 북한의 반자본주의적 풍속통제는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가 독재와 접합되어 나타나는 규율 메커니즘의 한 측면이라

30) 수전 손택 지음,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 서울: 이후, 2010.

고 볼 수 있다.

2. 파국의 이미지와 보호의 담론

문헌들에서는 “적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내부에 자본주의 사상문화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류포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날뛰었다”고 하면서 국가가 자본주의의 날로 심해지는 이러한 “교활한 책동” —즉, 질병들—로부터 인민의 정체성을 보호해 주었다는 담론으로 전환시킨다.

“당에서 모기장을 든든히 치고 철저히 막아 주었기 때문에 ...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자본주의사상문화와 생활양식에 물 젖지 않고 ... 존엄과 영예를 깨끗이 지키면서 사회주의생활을 꽃 피워...”

즉, 억압과 통제가 ‘보호’로 둔갑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의 담론은 ‘간부용’ 학습계강, 「자본주의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왜, 지금 중요한 문제로 나시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내부문헌에서는 침투가 보다 “교활”, “악랄”, “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침투의 주체와 투쟁의 대상은 외부의 “제국주의자들”과 내·외부의 “반동들”로 나뉜다.

여기서 잠시 수전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손택은 결핵, 암, 에이즈 등과 같은 질병들에 대해 덧씌워진 온갖 ‘은유’들을 비판적으로 논구하면서 그러한 은유가 발휘하는 효과에 대해 논한다. 이 저술에서 손택은 질병을 신비화하는 언어를 쫓아내고 우리가 질병, 더 나아가서는 삶과 죽음을 제대로 대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이 사색의 끝에서 손택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궁극적인 이미지,

즉 인간이라는 종의 종말을 암시하는 재앙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발생시키고 부추긴 사회의 현실에까지 눈길을 던진다. 특히, 질병을 은유로 사용하면서 “국가의 생존, 시민사회의 생존, 세계 자체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편집증적 사회가 손택의 공격 대상이다. ‘최후의 심판’ 같은 재앙을 연상시키는 수사를 남발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갖가지 방식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손택의 입장이다. 질병을 신비화하는 모든 언어를 쫓아내려는 수전 손택의 노력은 ‘투명성’(transparency)를 찾으려는 자신의 노력과 맞닿아 있다.³¹⁾ 이러한 질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온갖 은유들을 걷어내고 질병을 질병 그 자체로 바라볼 것을 주문하는 손택의 통찰을 뒤집어보면 자본주의적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이러한 ‘질병의 은유’가 겨냥하는 효과(effect)를 역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요컨대 자본주의에 관한 “투명성”을 제거하고 “신비화”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신체에 침투했을 때 벌어질 온갖 “재앙의 이미지”들을 제시하면서 “국가의 생존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각인시킴으로써 강력한 도덕적 규율을 작동시키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구체적인 형상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닌, 그저 공포스런 “은유”로서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2002년, 국경연선 지대 세관 단속에서 압수된 “불순선전물”이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시된 다음의 경고는 이를 단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변질와해되고 사회주의사상진지에 파렬구가 생겨종 당에는 사회주의가 물 먹은 흙담뱃처럼 맥없이 무너지게 된다. 이전 조선과 동유럽나라들의 참혹한 실태와 쓰라린 교훈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31) 수전 손택, “웁긴이 해설.” 앞의 책, pp. 257~258.

이러한 전염병과 파국의 위기 앞에서 “기본은 공격”으로 그것은 “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 즉 면역의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 병균이 스며 들지 못하는 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사람한테는 부르조아사상문화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맥을 추지 못하게 된다.”

“사회에서와는 달리 ... 인민군대안에 부르조아사상문화가 얼씬 하지 못하고 그 흔적조차 찾아 볼수 없는 것은 ... ”³²⁾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파국”의 이미지는 “만성”화된 이미지와 공존하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적들이 날치든 말든 점점 사상적으로 헤이되어 부르조아사상문화적 침투에 만성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일군들은 여기에 유혹까지 당하고 있다.”

“알아 본데 의하면 ... 집안식구들이 심심풀이삼아 때 없이 보고듣고 했을 뿐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병균에 감염되겠는가.”

“부르조아사상문화는 독성이 셀뿐아니라 그 전염력도 강하(며) 매우 끈질기다. ... 게다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부르조아사상문화를 침투시키는 데서 장기전을 펴고 있다.”

여기서 면역과 알레르기에 관한 의학적 상식을 잠시 언급해두면, 면역과

알레르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미생물이 침범하게 되면 인체는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나쁜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좋은 반응을 우리는 주로 면역이라고 부르고 세포나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나쁜 반응을 과민반응이라고 부른다. 과민반응이 곧 알레르기를 말한다. 그렇다면, 국가주의란 자기면역화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내부를 지키는 동시에, 내부의 갈등을 중화시키는 자기면역화 과정, 즉 외부의 내재화와 내부의 중성화를 목표로 한다. 공동체가 바깥을 향해 열려있다면, 면역화는 바깥을 향해 닫혀있는 자기폐쇄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에스포지토가 지적했듯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에 대한 편집증적 거부와 이에 반응하는 면역 메커니즘과 공동체가 벌이는 자가 면역의 악순환이다.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는 지나친 면역 메커니즘의 결과는 일종의 공동체의 ‘자기면역질환’³³⁾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에 당도할 수 있는 것이다.³⁴⁾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고 공동체 내부의 면역 메커니즘을 병적으로 강조하는 담론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나가자” 등 이러한 ‘신사고’의 ‘혁신’담론들을 동시에 수반하는 것은 이러한 난관을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안과 밖, 공동체와 외부라는 것의 경계에 놓여있는 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초병들을 위한 교양자료』에서 이러한 경계의 모호성이 드러난다. 즉, “단속은 철저하되, 말과 행동은 고상하게” 하라는 불가능한 주문이 주어진다.

32) 참고로, 이러한 담론에서 드러나는 선군의 의미는 ‘노동에서 군대로’라는 ‘사회주의’체제 성격의 변화라는 측면 보다는 ‘사회 일반과 군대’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립쌍이 발견된다.

33) 외부 항원에만 반응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자가 반응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41821&cid=51642&categoryId=51646> (검색일: 2015.07.15).

34) Esposito, R., *Imunitas*. Cambridge: Polity Press, 2013.

“만약 상대측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인민군 대 망신을 시키는 것은 물론 적들에게 우리를 헐뜯을 수 있는 언질을 주게 된다.”

이들 국경초병들에게는 ‘단속’과 ‘안내’의 이중적 역할이 떠맡겨져 있는 것인데, 이는 전염병의 유입경로라는 엄중함과 ‘교류와 유통’이라는 개혁의 현실성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초병들에게 놓인 엄중함과 유연성은 또한 북한의 현 상황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IV. 변화와 변질 사이에서

: ‘북한의 범위’(North Korean Boundary)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반자본주의’ 통치담론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일종의 변형된 증상주의적 국가전략 하에서 대외무역과 자본 유치, 시장화 등 일정한 대내외적 개혁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북한의 통치담론은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자본주의 비판은 “사회악”, “문화적 퇴폐”와 이를 막기 위한 “인생관”, “생활태도”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담론들을 일련의 질병의 은유라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개혁이라는 일정한 변화 속에서 공존하는 파국의 담론과 사수의 언어들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는 받아들이지만 “변질”은 막는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정하게 양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변화하는 현실이 마치 전염병과도 같이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닫는 공동체의 변질로 이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혐오”와 “공포”의 담론을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공동체의 변질을 막고자 하는 이러한 편집증적인 면역의 담론은 자체의 악순환의 메커니즘을 본원적으로 내장하게 되는데, 공동체의 내부에 대한 반응이 소멸해버릴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의 또 다른 위험 앞에서 “우리는 기존관념에 사로잡혀 지난 시기의 낡고 뒤떨어진 것을 붙들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고...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야...”³⁵⁾와 같은 담론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한 목도한다. 즉, 면역의 메커니즘은 이질적인 것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가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서의 투입을 통해 다시 부정함으로써 공동체를 강화하고 보존하는 전략이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김 위원장은 서구식 개방은 원하지 않으며 북한식 전통을 유지하는 데 해롭지 않은 개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가 혼합된 중국식 개방에는 관심이 없으며 전통적 왕권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독립을 유지하고 경제도 발전시킨 태국 모델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³⁶⁾ 물론 10년이 넘게 지났으며 태국 모델로 나아갈 지는 미지수요, 현재 김정은의 행보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도 않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담론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소위 북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연’과 ‘내포’라는 양자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면적인 양태의 변화 속에서 변화라는 외연의 확대가 변질이라는 내포의 변화를 동반할지, 아니면 변화의 외연이 내포를 보다 더 적절히 조절해 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

냉전시기를 풍미한 개념인 아메리칸 바운더리(American Boundary)라는 개념이 있다. 그 범위란 반공주의와 민주주의였다. 반공주의가 민주주의를 넘어서서는 곤란하지만 민주주의는 또한 반공주의의 한계 내에서 작동

35) 조동호, “김정일, 변화-유지 두 얼굴 보여.” 『nk조선』 2005년 2월 3일.

36) “올브라이트 前 美 국무, ‘金正日, 중국식 개방 관심 없다.’ 『동아일보』 2003년 9월 2일.

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은 이승만의 반공주의가 민주주의의 최저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자 암살의 계획까지 세운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 민주주의가 그만큼 숭고해서였을까? 반공주의와 민주주의는 그저 이질적인 것의 병존 혹은 대립적인 것의 공존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 조건을 한계 짓는 무엇으로 봄이 적합하다. 민주주의의 최저선에 대한 위협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공주의적 연관성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반공주의의 확대는 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의 최소한을 상실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유명한 개념을 원용해 본다면 북한의 그것은 국가주의와 발전주의이다. 유사하게도 북한의 발전은 국가 자체의 재생산과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또한 국가주의가 일정정도의 발전을 저해해서도 안 된다. 북한의 변화는 이 범위 내에서 용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 내에서 반자본주의와 비사회주의의 담론적 내용도 새로 구성, 재구성될 것이다.

나병(癩病)이 상징하는 이항 대립적 추방모델과 달리 페스트의 번역모델은 일정한 국면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범주와 규칙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공간들이 새롭게 분할·배치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속에서 주체들은 체제에 맞는 ‘적절’한 신체들로 만들어 짐으로써 내외부의 위협에 대처하는 신체로 거듭난다. ‘시장화’로 표현되는 체제와 사회의 변화는 이런 일련의 총체적인 통치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과연 북한은 앞으로 나병이 은유하는 성분체계 및 수용소의 메커니즘을 다시 활성화시킬지,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은유하는 접촉/교류 시대에 대응한 번역학적 규율메커니즘을 일정하게 지속할 것인지, 벗어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한 국면에서 천연두가 은유하는 통계학과 예방의 패러다임에 따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국내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권장하면서 사후적인 조절 메커니즘을 작동시켜갈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시장화와 통치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흥미로운 지점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라, 『미셸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3.
- 고경민, 『북한의 IT전략: IT전략, 전자정부, 인터넷』,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고유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생존전략.” 『세계정치경제』 제3호, 1996.
- 고유환·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화 연구.” 『서울평양학회보』 창간호, 2002.
- 김상은, “종족, 신가산제 그리고 내전: 엘리트-대중 이해관계 분리.”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류길재, “『외국』의 제도화: 군사국가화 경향과 군의 역할 확대.” 최완규(편),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 서울: 난장, 2011.
- 박형중 외,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브루스 커밍스 지음, 김동노 외 옮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과주: 창작과 비평, 2001.
- 성원용, “강력한 국가 틀 속에서 신중상주의정책 추구.” 『통일한국』 2000년 2월호(통권 제194호).
- 수전 손택 지음,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 서울: 이후, 2010.
- 이정철, “북한의 개방 인식 변화와 신(新)자력갱생론의 등장.” 『현대북한연구』 제9권 제1호, 2006.
- 장원석, “2004년 브루스 커밍스의 북한독해 일고.” 『통일문제연구』 2004년 상반기(통권 41호).
- 정병화, “‘관성적 권력’으로서의 ‘선군정치.’” 『대한정치학회보』 제20집 제2호, 2012.
- 조동호,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북한경제』 2001년 제1호.
-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서울: 박종철출판사, 2002.
- 최대석·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3권 제2호, 2011.
- 최정현·김미애, 『조선청년의 장점』,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1.
- 하호수, “푸코의 세 권력/지식 모델과 생명정치.” 『동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행정학회, 2010.

한병철,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함명식·박진서, “중국에서의 경제개혁과 국가-노동관계의 변화.” 『연세학술논집』, 1999.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강연제강(근로청년용)』,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02.
 『전초병들을 위한 교양자료』 제21호(누계493호),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1.
 『학습제강(간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Esposito, R., *Imunitas*. Cambridge: Polity Press, 2013.
 Haque, N., “Beyond Planning and Mercantilism: An Evaluation of Pakistan’s Growth Strategy.” *The Pakistan Development Review*, vol. 45 no. 1, 2006.
 Howarth, D., *Discours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2000.
 Mansourov, Alexandre Y., “Mercantilism and Neo-Imperialism in Russian Foreign Policy during President Putin’s 2nd Term.”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VII, no. 1, 2005.

올브라이트 前 미국무, “金正日, 중국식 개방 관심 없다.” 『동아일보』 2003년 9월 2일.
 조동호, “김정일, 변화-유지 두 얼굴 보여.” 『nk조선』 2005년 2월 3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41821&cid=51642&categoryId=51646>
 (검색일: 2015.07.15).

ABSTRACT

Capitalism as a Disease
 : Governing Discourse on Anti-Capitalism of North Korea

Han, Jae-Heon(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ims not only to grasp the post-economic difficulty of reformation of marketization and its consequent phase of governing discourse, but also to inquire into its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of all,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mercantilism, corporatism and patrimonialism are respectively introduced to define national strategy and ruling system of North Korea.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and ruling system have been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times, from corporatist mercantilism into patrimonialist mercantilism, this study will inquire about the composition of content and form of the governing discourse of “anti-capitalism” accordingly.

The text as a subject of analysis corresponds to materials of internal lecture script of North Korea, in which the metaphor of capitalism as a “disease” is mainly detected. In conclusion, the “metaphor of disease” is designed to accumulate fear and hatred of capitalism, in addition, this metaphor reveals that it is a discourse strategy for preventing North Korea’s change from proceeding toward internal alteration.

Keywords : North Korea, anti-capitalism, non-socialism, governing discourse, mercantilism, metaphor of disease, patrimonialism, corporatism, police, change, alteration

투고일 : 2015년 06월 30일, 심사일 : 2015년 07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8월 06일